

광남시론

환단고기(桓檀古記)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도중 역사교육과 고대사 논의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둘러싼 논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묻자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 이사장은 해당 논쟁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이때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환단고기' 논쟁이 주목받고 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고대상고사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묶어 편찬한 책으로 20세기 초 윤초 계연수에 의해 처음 소개됐고, 1979년 이우림이 편찬했다고 하며 최근에는 중산도 안경전 종도사께서 정리·간행했고, 한국, 배달,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조선상고사 역사를 담고 있다.

환단고기는 기존의 한국 고대사 통설보다 훨씬 앞선 1만년 가까운 시간과 만주지역을 능가하는 넓은 공간을 상정하며, 한민족 문명의 기원을 크게 확장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민족단체들에게는 잃어버린 상고사의 복원으로 민족정기를 되살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토대로 생각하며, 일제식민사관을

신봉하는 강단사학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화와 같은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일제식민사학자들로 구성된 주류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본의 실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저자와 편찬·전승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사료 및 고고학 자료와의 교차검증이 어렵다는 점들을 주로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환단고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고대사 연구가 지나치게 제한된 사료체계에 의존해 왔다는 점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연구 틀이 해방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사관 속에서 한국 상고사가 축소 주변화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관점에서 환단고기는 완결된 역사서라기보다, 기존 연구 틀에 질문을 던지고 상고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문제 제기 자료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은 환단고기 논쟁에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에게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공개발언을 했지만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논리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사관에 충실하려는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제 대폭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국가기관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목적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다. 동북공정 학술대회에서 단

한 번도 동북공정을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동북공정을 규탄하는 국민을 진정시키는 작업만 했다.

둘째, 연구인력의 구성이다. 먼저 이사장이 정권에 따라 바뀌면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이사장, 외교부 파견 사무총장들이 자리를 지키는 자리이니,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

셋째, 지금까지 20년간의 실적을 철저히 냉철하게 평가하여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동북공정 대응은 실패했다. 중국이 이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자국역사로 조작완료했는데 아직도 2000년대 대응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족사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역사재단법을 만든 국회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민족단체에서 2004년 이후 열린 한중학술회의 자료공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재단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향후 동북공정이나 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하고 역사 부분은 새로 정립된 동북아역사재단과 상의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팬데믹 위험이 상존하는 지구촌 문명의 대전환 시기이다. 국제질서 또한 미국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외교와 다국화 체제로 인해 그 중심을 잃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가 아직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나 국제정세변화와 우리 모두의 통일운동으로 머지않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환단고기를 비롯한 조선상고사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올바른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 정부는 '바른역사정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환단고기를 통해 민족정기를 세우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존중의 기준이 돼야

오미화

전남도의원



오는 7월 전남과 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나쁜 관행'이 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짧게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

이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계약 관행을 강하게 질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정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광주 약 600명, 전남 약 200명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금도 11개월 미만 단위 계약과 퇴직금 회피형 해고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을 감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부 기관의 일탈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예산은 연 단위로 편성되고, 사업은 단기 계약 중심으로 설계된다.

그 결과 발생하는 불안정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공공이 고용의 안전망이 아니라 불안정의 생산자가 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건 돌봄과 같은 사회 필수 서비스 영역일수록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낮은 임금과 단기 계약 구조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전남에 요청한 통합돌봄서비스 전담 인력 464명 중 확보된 인력이 83명에 그친 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구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필자 역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의 '2년 자동 사직'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조차 정작 직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은 공공부문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공공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9299원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66% 수준에 머

물려 있다. 불안정은 더 크고, 보상은 더 적은 구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통합은 단순 행정 개편을 넘어, 새로운 노동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수도권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풀지 못한 문제를 먼저 풀어내는 국가적 실험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부문 '조끼 계약'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는 상시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반복 계약과 같은 편법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전남·광주형 공영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경기도 시행 당시 91.5%의 만족도를 보였던 공영수당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흐름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필수 장치다.

셋째, 공공워킹 구조를 혁신하고, 통합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행정 통합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결정된다.

2년마다 떠밀려 나지 않는 일터, 퇴직금 하루 전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일한 만큼 경력이 인정되는 상시적인 구조, 그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통합은 행정 이 아니라 삶이 된다. 그리고 그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이 될 것이다.

취재수첩

전국장애학생체전 선수단에 관심과 응원을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전국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부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종목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역시 수많은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이 출전한다. 우선 광주에서는 육상 등 10개 종목에서

122명(선수 75명, 감독·코치21명, 임원 및 관계자 26명)의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목표로 나선다.

먼저 여도 김유나(선예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유나는 지난해 대회 여자 -60kg급 지적 OPEN 중등부 스쿼트·데드리프트·파워리프트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같은 종목 신정아(선예학교)의 활약도 기대된다. 그는 지난해 대회 여자 -60kg급 지적(발달)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6kg을 들어 올려 학생신기록을 경신했다.

육상 이가은(광주선명학교), 배드민턴 송형우(광주선명학교) 역시 기대주다.

전남에서는 11개 종목에 296명(선수 159명, 감독

44명, 코치 30명, 보호자 32명, 임원 31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5위를 목표로 잡았다.

전남은 이번 대회 육상 종목 활약이 예상된다. 특히 육상(트랙·시각) 여자 100m와 200m에 출전하는 노연희(은광학교) 지난해 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해 금 2·은 6·동 6개를 따내며 종합 2위에 오른 e스포츠 종목 또한 더 높은 곳에 도전한다.

여기에 지난해 수영(지적)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김수현(구례여중)과 배드민턴 여자 단식(지적) 금메달을 획득한 김예지(함평영화학교) 또한 정상 수성을 노린다.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감동의 무대다. 이들은 이 대회를 통해 한 해 노력의 결과와 훈련의 결실을 보고, 앞으로의 희망을 그린다.

불리한 환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지역의 명예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응원과 격려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사설

통합특별시 청사진 제시됐지만...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목표가 담긴 정책 연구 제안서가 나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한 '광주 싱크넷' 8호를 발간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 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광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실험으로 규정해 조정했다.

여기에서 연구진들은 통합특별시는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 모델로 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비전으로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제시했다.

또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경제규모 300조원, 광역인구 500만명 등을 목표로 설정했고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평균임금 5000만원, 질 좋은 일자리 15만개 창출도 제안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기존 주력산업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조성 △도시·농어촌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운영을 들었다.

문제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시킬 일부 지역 현안사업들이 통합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무늬만 통합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과 16개 부칙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인구 감소 대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394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부 핵심 현안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해상풍력, 농지 규제, 공공화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 등과 직결된 사안들인 11개 특례가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국회와 협의해 이들 미반영 현안사업들이 후속입법과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광주·전남 디지털 소외 심각 대책 서둘러라

광주·전남지역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 활용도와 구매 경험 등 주요 지표에서 타 권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AI 시대 5급3특 지역적 소비생활 진단' 보고서를 보면 지역 디지털 기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권으로 분류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와 'AI 소비행태 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첫 사례다.

이에 따르면 호남권 소비자의 AI 인지도는 81.4%로 5개 광역권 중 가장 낮았다. 이는 가장 높은 인지도율을 보인 동남권(88.8%)이나 수도권(87.1%)과 비교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호남권은 실제 일상이나 업무에서 AI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28.2%에 그쳐 전국 평균인 32.3%를 크게 밑돌았다.

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해 본 경험률 역시 69.5%로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60%대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다. 전통적인 디지털 소비 영역인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도 마찬가지였다.

호남권의 전자상거래 경험률은 60.7%로 수도권(76.9%)과 16.2%p 차이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73.1%)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앱 기반의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률의 경우 28.4%에 불과, 가까스로 수도권(56.4%)의 절반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49.8%)과도 21.4%p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지역간 디지털 소비환경 격차가 AI 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디지털 결제 이용 환경 개선과 접근성 강화는 물론 신기술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민이 일상에서 신기술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